■ 대권도전 위기 맞는 고건

범여권 유일대안 지위 '흔들'

민주당 거리두기·여당선 구애손짓 안해

지지도 하락·희망연대 출범 연기 원인

고건 전 총리가 외우내환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별다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도권에 교두보를 확보한 민주당의 부상 등 정치권 지형 변화로 발언권도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건 전 총리의 대권도전 캠프로 주목받았던 '희망연대'의 출범오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면서 대권 도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지형 변화**=우선 지방선거 직후 대안 부재 등으로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됐던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체제를 중심으로 '흘어지면 망한다'며 오히려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기상으로 열린우리당이 고건 전 총리에 손을 내밀기는 이른데다 고건 전 총리가 희망연대 출범 등을 통해 정치적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열린우리당에서 먼저 구애하기는 힘들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7·26 재·보궐 선거에서 조순형 후보의 당선을 계기삼아 독자적으로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고건 총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낙연, 신중식, 최인기 의원 등도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하락**=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하락은 고건 전 총리의 정치적 발언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3위로 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지율도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위험선인 20%를 넘나들고 있다.

여권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주목받았던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희망연대 출범 연기**=고 전 총리의 대권도전 캠프로 알려진 희망연대의 출범 지연도 고 전 총리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고 전 총리 측은 "수해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연대 출범식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출범 연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7월 말, 8월 초순 등 두 차례나 희망연대의 출범이 지연된 것은 소위 인력 풀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추후 정치일장과 관련 내부 이견이 표출되는 등 대권 캠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건 전 총리의 측근인 김덕봉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은 "희망연대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오는 29일 희망연대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고건 전 총리는 여야 의원들과의 폭넓은 만남을 갖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중·고교 동창 만난 국회의장 나주 출신으로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임채정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중·고교 동창 등 지인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법관 993명 재산 첫 전격 실사

99명 등록 누락 등 부실 신고 확인

소명 안되면 징계… 법관 동요 클 듯

대법원이 일선 법관 993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전격적인 실사를 벌인 결과 99명의 법관이 재산 등록 누락 등 부실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이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이 아닌 평판사들의 비공개 재산을 정밀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등록재산과 실사결과가 차이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금융자산 실사까지 벌인 뒤 징계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인사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어서 일선 법관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로 부터 사법연수원 21~29기 판사 993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아파트, 주택, 상가 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 유가증권 내역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전체 법관들은 앞으로 3년에 1번씩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밀 재산실사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엄격한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법관 재산실사를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올해 사법연수원 20~29기의 법관 993명의 재산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부모·형제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초부터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법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부동산 자료를 건네받아 판사들이 직접 제출한 재산 내역과 비교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등 부실 신고를 한 법관에게는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 공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년 주기로 법관 재산실사를 실시키로 한 후 사법연수원 19기까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373명의 재산 내역을 정밀 조사했으며 올해 들어 3년 주기로 재산실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강화했다.

지난해 당시 대법원은 부동산을 팔았음에도 본인 소유로 잘못 기재했거나 상속 등에 따른 지분을 누락한 49명의 부장판사를 적발해 보충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단순착오로 밝혀진 47명을 제외한 부장판사 1명에게 서면경고, 또 다른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동(花童) 김현희 새로운 사진 발굴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이선실은 실존 인물"

■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결과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1일 KAL기 폭파사건과 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새로운 사실을 상당 부분 밝혀냈지만 모든 의혹을 털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진실위는 김현희 '화동(花童)사진'의 진위 논란과 관련, 새로운 사진을 확보해 북한 출신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흔적도 발견했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김승일의 정확한 신원이나 두 사람이 바레인에서 보인 행적을 둘러싼 의혹, 폭발물 내용 및 추락과정 등은 과제로 남겨뒀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김현희씨의 증언을 촉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19년이 되는 11월 29일 전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 진실위의 1일 중간 조사결과에서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가 북한의 공작원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화동'(花童) 사진이 발굴됐다. 사진은 1990년 2월 15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기자인 하기와라 료가 자신의 저서 '서울과 평양'에 공개한 사진으로 3번이 김현희. /연합뉴스

"KAL기사건 기획조작 근거 없어

공범 김승일 신원 등은 못밝혀"

◇**KAL기 폭파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들**=진실위는 당시 안기부의 기획조작설 및 사전인지설 등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진실위는 안기부 직원이 별도의 폭탄을 비행기에 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 직원의 탑승이나 폭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탑재된 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전인지설의 핵심 의혹이 돼온 '아부다비에서 고위 외교관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KAL기에 탑승했다 사망한 강석재 이라크 총영사 부부를 빼고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지역 공관장이 모두 11월 29일 이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근거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위는 또 김현희씨가 '안기부 공작원'이라는 주장을 뒤엎는 김씨가 북한 출신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미공개 화동 사진을 확보했다.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당시 남측 대표단에 꽃다발을 준 북측 화동 중에 중학생인 김현희가 있었음을 당시 일본 공산당 기관지의 평양 특파원이 보관 중이던 사진 36장을 진실위가 지난 4월초 새로 입수하면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밝혀진 내용**=이 사건은 1990년대 대표적 간첩사건으로, 조작의혹이 꼬리를 물었지만 진실위 조사 결과 이렇다할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각기 다른 중부지역당·조애전·애국동맹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게 진실위의 판단이다. 또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략적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총책격인 간첩 이선실은 월북한 제주 출신 '이화선' 이라는 실존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실체 유무에 대한 의혹이 일었던 중부지역당도 실재했던 조직이었다는 것이 진실위의 결론이다.

◇**KAL기 폭파사건 남은 의혹들**=진실위는 폭발범인 김현희·김승일의 당시 바레인 행적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블랙박스 등 물증이 보강되지 않으면서 사고 실체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안기부와 김현희의 밀약관계'와 관련된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김현희 강제 조사 검토

국정원이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의 주범 김현희(44)씨를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가 수 년간의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역사의 증인'으로 모든 의혹들을 털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원 진실위가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작 김현희씨와의 대면조사는 하지 못했다. 국정원 진실위는 그동안 김씨의 남편과 친척을 통하거나 성직자를 통한 신앙고백 형태 등으로 최근까지 10여차례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과거 호의적이었던 국정원이 현재는 달라져 KAL858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세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은 2003년 말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KAL기 폭파사건의 사전조작설을 담은 소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돼 검찰 소환 대상에 오르내리고 마침 한 방송사가 자택과 친척집 등을 오가는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자 잠적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정부가 그를 빼돌렸다는 억측도 나돌았지만 이보다는 그가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